

김정은 시대, 북한식 데사코타의 출현?: 북한도시연구에 내재된 도시-촌락의 이분법을 적출하기*

황진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도시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데사코타 개념의 통찰을 빌려 온다. 현재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군(郡)을 단위로 한 촌락과 도시의 공간적 연계의 정책적 강조와 농촌살림집 및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을 앞세운 촌락의 도시화 과정은 형태적으로 '북한식 데사코타'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본 논문은 도시와 촌락의 이분법에 경도된 서구 도시연구를 비판한 지리학자 Terry McGee의 문제의식을 빌려 와 북한의 도시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북한도시의 맥락에서 데사코타를 개념화함으로써 북한도시의 공간적 역동성을 포착하는 데 방해가 되어 온 도시-촌락의 이분법적 인식을 적출할 인식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둘째, 이념·체제적 차이가 데사코타 형성에 미치는 측면을 강조한 북한식 데사코타를 통해 기존 아시아 도시의 데사코타 논의의 지평을 넓힌다.

주제어 북한 도시, 데사코타, 김정은, 도시-촌락의 이분법, 아시아 도시, 비교도시론

I. 들어가며

1990년대 초반 지리학자 Terry McGee는 데사코타(desakota) 개념을 제안하면서 서구 학계의 주류 도시이론이 서구 도시들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비(非)서구 도시에서도 서구 도시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는 서구중심성을 비판했다(McGee, 1991). 그의 문제의식은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도시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Jean Gottman(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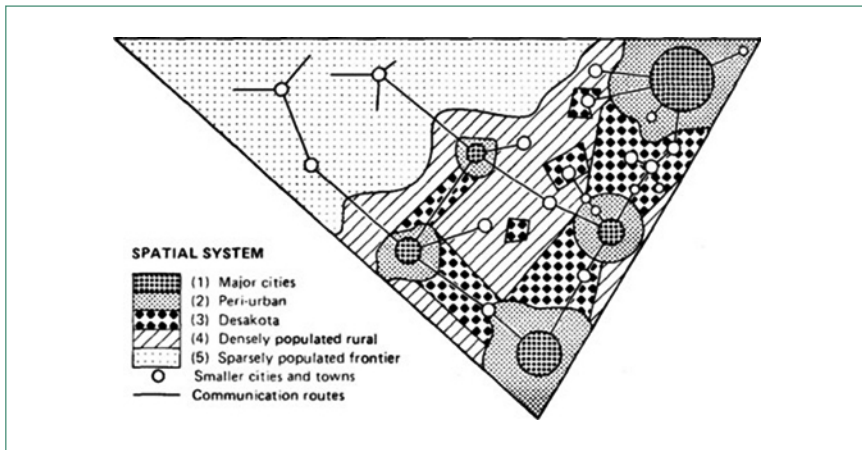
* 이 논문은 2022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는 본 논문의 초고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논평을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논문의 핵심 개념인 데사코타를 고안한 Terry McGee는 2015년 5월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필자의 발표에 애정 어린 질문을 해 준 기억이 떠오른다. 고령인 그가 건강하길 바란다.

의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개념을 겨냥했다. 메갈로폴리스는 미국 북동부 해안을 따라 성장한 각각의 대도시들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Gottman은 메갈로폴리스가 형성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y)로 인하여 인구가 도시에 집중된 것을 주목했다.

McGee가 Gottman을 비판하는 지점은 미국 북동부 사례를 통해 메갈로폴리스 개념을 고안한 것에 있지 않고, Gottman이 미국 북동부의 경험적 산물인 메갈로폴리스를 급속한 도시화가 나타나는 다른 지역들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될 것이라고 기술한 데 있다(Gottmann, 1961: 257). McGee는 메갈로폴리스처럼 집적경제로 인해 인구가 도시에 집중된다고 보는 시각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도시뿐만 아니라 촌락에도 상당한 인구가 밀집되었고, 특히 농업·비농업 활동이 혼재된 공간형태(즉, 데사코타, 그림 1의 체크무늬 영역)가 대도시들을 잇는 회랑(回廊, corridor)을 따라 형성되었음을 강조한다(표 1).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역사적 배경에는 식민지 시기 아시아 국가들은 제국의 식량기지 역할을 맡게 되면서 농촌에 인구가 많이 존재하고, 도시화율은 낮았기 때문이었다(McGee, 1991: 5).

정리하면, McGee는 서구 도시들에서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촌락과 도시의 활동이 각각 공간적으로 분리되었던 역사적 경험이 비서구 도시들에서도 유사하



출처: McGee(1991: 6).

그림 1 McGee가 제안한 '가설적인 아시아 국가의 공간구조'

표 1 데사코타의 6가지 특성

- 소규모 쌀생산에 참여하는 많은 인구
- 농경지였던 지역에서의 비농업활동 증가
- 인구의 높은 이동성
- 매우 다양한 토지이용(농업, 가내공업, 공업단지, 교외개발 등)의 혼재
- 비농업부문에 참여하는 여성노동 비중의 증가
-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색지대(gray zone)

출처: McGee(1991: 16-17).

게 나타날 것이라는 도시-촌락의 이분법(urban-rural dichotomy)적 인식이 서구 중심적으로 편협하며, 이러한 서구중심성에서 탈피하고자 데사코타와 같은 새로운 개념과 이론을 고안할 필요성을 제안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도시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데사코타 개념의 통찰을 빌려 오는 이유는 현재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군(郡)¹을 단위로 한 촌락과 도시의 공간적 연계의 정책적 강조와 농촌살림집,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 등을 포함한 촌락의 도시화 과정이 형태적으로 ‘북한식 데사코타’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도시-촌락의 이분법에 경도된 서구 도시연구를 비판한 McGee의 문제의식을 빌려 와 북한의 도시화를 조망하고자 한다.

기존 북한도시연구는 서구 학계에 고착화된 도시-촌락의 이분법적 인식과 유사하게 전형적인 도시(city)로서 인식되는 요인들(상위 행정·교육기관의 입지, 높은 인구 밀도, 주요 사회간접자본(철도, 도로, 공항 등)의 밀집)을 기준으로 삼아 촌락과 대비되는 도시를 구분해 왔다. 이러한 북한도시연구에 깔려 있는 도시-촌락의 이분법적 인식은 도시와 촌락의 공간적 연계를 도시화의 일환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Lefebvre, 2003). 더불어 방법론적 제약(분단상황으로 인한 제한된 정보수집, 불가능한 현지 답사)으로 인해 북한도시연구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자료확보가 용이한 도시인 수도 평양에 관한 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²

¹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군은 군대를 가리키는 군(軍)은 없음을 밝힌다.

² 박성열 외(2021: 138-139)는 1990년대부터 2021년 3월까지 발간된 북한도시연구들의 조사지역을 파악했는데, 평양이 45건, 나머지 도시가 17건으로 평양 연구가 압도적이고, 특히 2010년대 들어서 평양으로의 쏠림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혹자는 이처럼 방법론적 제약으로 인해 연구후보지에서 평양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조건에서 “북한도시연구에서 ‘도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와 같은 인식론적 성찰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차에 접어들고, 북한학계는 김정은 집권을 계기로 북한도시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는 점, 특히 그간 도시화가 평양에 집중되어 오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지역 불균등 발전(평양 vs. 지방, 도시 vs. 촌락)의 해결이 정권 차원에서 중요해지는 것과 조용하여 추진되는 농촌살림집 건설과 같은 새로운 ‘도시화’ 현상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 도시-촌락의 이분법이 기반을 둔 기존 인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론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데사코타 개념을 기계적으로 북한도시에 적용하는 것은 지양한다. McGee(1991)를 포함한 선행연구들에서 데사코타 형성의 주요 동력을 자본주의 성장에 두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시장보다 이념을 우선하는 사회주의적 특성 그리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차별적인 3대 세습 독재라는 북한식 지배체제의 특성이 결합되어 데사코타가 추동되었다는 점에서 이념·정치체제에 따른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데사코타 개념이 북한도시연구에서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서둘러 내리기보다는 ‘북한식 데사코타’와 선행연구의 데사코타 간의 개념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차이와 유사성을 파악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생산적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북한도시의 맥락에서 데사코타를 개념화함으로써 북한도시의 공간적 역동성을 포착하는 데 방해가 되어 온 도시-촌락의 이분법적 인식을 적출할 인식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둘째, 이념·체제적 차이가 데사코타 형성에 미치는 측면을 강조한 북한식 데사코타를 통해 기존 아시아 도시의 데사코타 논의의 지평을 넓힌다.

이하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데사코타가 북한도시연구에서 갖는 개념적 의의 및 긴장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한다. III장에서는 북한식 데사코타의 대표적 공간형태로서 군(郡)의 역할을 강조해 온 역대 북한 최고지도자들의 논의를 검토한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 개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김정은의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 강령」(이하 새로운 농촌체제)에서는 군을 매개로 한 도시와 농촌의 연계, 농촌의 도시

화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이 강령에 맞춰³ 2022년에는 농촌살림집 건설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선대와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아이디어는 온전히 그 개인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1960년대 발표된 김일성의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이하 사회주의 농촌테제)(김일성, 1994)로부터 시작하여 김정일(2013)을 거친 유훈계승의 측면도 간과해선 안 된다. 따라서 선대 지도자들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북한식 데사코타의 개념적 계보의 추적이 필요하다. IV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연구 방향을 간략히 다루는 것으로 본 논문은 마무리된다.

II. 북한도시연구에서 데사코타 개념의 이론적 시사점 및 한계

1. 아시아 도시연구에서 데사코타 개념의 의의

1990년대 초반 McGee는 데사코타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그린 그림 1의 제목을 “가설적인 아시아 국가의 공간구조(the spatial configuration of a hypothetical Asian country)”라고 칭했다. 이 제목이 함의하듯이, 그는 서구 도시이론에 대한 대립/대항적 측면에서 아시아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오늘날 주류 도시연구의 서구중심성을 인지하고, 이것을 약화·해체시키기 위해 비서구적 인식론이 필요하다는데 비서구권 도시연구자들은 대체로 공유한다. 하지만 서구에 대한 대립/대항의 자리에 비서구를 위치시키는 것(즉, 서구 vs. [비서구])에서 머문다면 대등한 것처럼 보이는 ‘A vs. B’ 구도 이면에 작동하는 중심부 학문으로서의 서구와 주변부 학문으로서의 비서구라는 기울어진 권력관계를 간과하고, 비서구는 주변부/국지성/특수성/예외성의 범주에 고착되기 쉽다.

몇몇 연구자들은 아시아라는 비서구의 공간적 특수성에 기초한 데사코타 개념이 서구 도시를 “보편화된(globalized)” 공간으로 상정하고, 데사코타는 제3세

³ 2022년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강령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이 채택되었다.

계에서 나타나는 “국지화된(localized)” 공간으로 국한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서구/제1세계/보편’ vs. ‘비서구/제3세계/특수’의 구도가 재생산되는 역설(즉, 동양에 대한 서구의 왜곡과 편견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구축에 비서구가 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데사코타 개념에 비판적이었다(Dick and Rimmer, 1998; Ortega, 2020: 672). 대표적으로 Dick and Rimmer(1998)는 아시아 도시들의 내적 특수성보다 외부(주로 서구)와 맺는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식민지 시기와 세계화 시기라는 두 시기 동안에 아시아 도시들은 외부와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서구 도시들처럼 기술발전과 (특히, 세계화 시기에는) 경제성장이 발생하였고, 이는 서구 도시화와 유사한 양상이었다면서 McGee가 주목한 데사코타는 식민지 시기와 세계화 시기의 사이에 발생한 ‘전환적 경험’이라 평하며 그 중요성을 낮추었다(Dick and Rimmer, 1998: 2318). 그렇다면 데사코타 개념은 오리엔탈리즘을 재생산시키는 문제적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일까? 여기서 필자는 비교도시론(comparative urbanism)의 측면에서 데사코타 개념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1990년대 초반 McGee가 도시연구의 서구중심성을 비판한 문제의식은 2000년대 들어서는 후기식민주의 지리학자 Jennifer Robinson이 제안한 “보통의 도시들(ordinary cities)”(Robinson, 2006) 테제로 이어진다. 보통의 도시들 테제는 도시연구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소수의 도시들(뉴욕, 런던, 도쿄, 뉴델리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고안된 이론과 개념들을 나머지 지역에 적용하면서 보통의 도시들에 내재한 고유한 다면적 복합성을 놓쳤음을 비판한다. 2010년대에는 보통의 도시들로부터 새로운 도시이론을 고안하여 서구 중심의 지식 체계모니를 해체하려는 비교도시론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Robinson, 2016).

서구중심성을 비판해 온 연구자들의 시각에서는 일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최근 비교도시론 연구자들 중에는 서구중심성에 대한 주요 비판대상인 서구 도시이론조차 연구자의 사례분석에 유용하다면 선택적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정 이론의 보편화/추상화가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분석에 있어서 어떤 이론들이 효과적인지를 테스트하는 데 방점을 둔다는 점에서 그간 답습해 온 ‘1세계 이론의 3세계 적용’과는 차별화된 적극적 성찰로 볼 수 있는 것이다(Sayın et al., 2022; 황진태, 2022a: 32).

어쩌면 데사코타의 어원이 인도네시아어⁴라는 사실은 이 개념이 학계에 공개 되는 순간부터 비서구/제3세계/특수성/국지성의 텃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고, Dick and Rimmer(1998)와 같은 비판이 나온 것은 예상된 수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1990년대 후반 Dick and Rimmer(1998)가 데사코타 개념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개념이 국제학계에서 기각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즉, 개념의 언어적·지리적 기원의 한계보다는 서구중심성에 경도된 도시연구 지형을 흔든 나름의 내구성을 갖춘 측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비서구/특수성/국지성의 텃으로부터 데사코타 개념을 탈출시킬 시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도들은 인식론적·방법론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인식론적 측면이다. ‘데사코타 구하기’를 주도하는 대표 연구자로 Ortega(2012; 2020)를 들 수 있다. 그는 Dick and Rimmer(1998)가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데사코타도 최종적으로는 제1세계의 도시들과 같은 양상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가정을 공간결정주의(spatial determinism)라고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도시화라는 필연적 과정으로 지역을 바라보기보다는 해당 지역을 채우고 있는 공간적·역사적 우발성과 구체적인 행위자들을 주목함으로써 데사코타를 반본질주의적, 열린 개념(open concept)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했다(Ortega, 2012: 1122). 이러한 접근의 유효성을 증명하고자 필리핀 수도 마닐라와 인접한 데사코타 지역을 분석하는데, 그는 농지였던 자리에 폐쇄적 고급주택단지인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나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이 직면하게 된 토지관계의 변화와 이를 막기 위한 그들의 저항이 미친 영향을 주목했다(Ortega, 2012: 1133-1136).⁵ 즉, 데사코타의 형성 과정은 추상적인 자본의 흐름이 지배적이고, 지역의 주민들은 그러한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수동적인 행위자가 아닌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성을 갖고 있음을 환기시킨다.

⁴ 인도네시아어로 desa는 촌락을, kota는 도시를 가리킨다.

⁵ 데사코타 개념이 낯선 독자들의 오해를 피하고자 설명을 덧붙이면 Ortega의 연구에서 언급된 게이티드 커뮤니티, 대규모 리조트는 데사코타의 6가지 특성 중에서 다양한 토지이용 중의 하나인 교외개발과 관련된다. 즉, 농업 지역에서 도시적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나 관광산업과 관련된 경제공간이 들어서는 것은 농업/비농업 활동의 혼재적 양상을 의미한다.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Ortega(2020: 673)는 McGee가 정의내린 데사코타 원(原) 개념에서 Dick and Rimmer(1998)가 데사코타를 ‘국지화된 공간’으로 단정하는 빌미를 제공한 특성들을 제거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소규모 쌀생산에 종사하는 많은 인구, 비농업 노동부문의 여성 비율 증가와 같은 특성들은 동남아시아적 특수성을 두드러지게 한다고 보고, 이것들을 데사코타를 정의하는 주요 목록(표 1 참조)에서 제외시킬 것을 제안한다. 대신에 McGee가 데사코타의 ‘핵심 과정’으로 강조한 도시적 생활방식과 농촌적 생활방식의 역동적 상호작용 또는 농업적 활동과 비농업적 활동 간의 연계에 방점을 두는 것을 주요 목록에 남기는 것이 다른 지역에 데사코타 개념을 적용하는데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Ortega의 제안은 다음 2절에서 기존 데사코타와 차별화된 북한식 데사코타를 개념화하는 이론작업에 영감을 준다.

다음으로는 방법론적 측면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데사코타의 존재를 확인하지만, 양적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도 상당수 있다. 양적 방법론을 활용한 사례지역은 주로 중국이다. 농촌/비농촌의 인구 및 토지피복변화와 같은 통계자료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체계)로 가공하여 데사코타를 지도상에 시각화·시계열화를 하고, 질적 방법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방대한 토지의 이용변화에 관련된 각 행위자들(지역주민, 정부 관료 등)의 의사결정의 역학을 추정하고, 미래 데사코타의 공간적 변화를 전망할 수 있는 ABM(Agent-Based Modelling: 행위자 기반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Xie et al., 2007). 이러한 양적 연구방법론의 강점은 질적 연구방법론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양적 방법론을 적용한 데사코타 연구들이 중국 사례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중국 이외 데사코타로 지목된 지역에서의 통계자료 획득이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령, ABM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입, 세금, 지역별 공장수, 각 경제부문(1-3차)의 총생산가치 등의 세밀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Xie et al., 2007: 487).

한편, 양적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가 데사코타를 일종의 ‘모델’로 간주하고 데사코타의 존재를 수치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추구하다보니 데사코타를 채우고 있는 사회·정치·문화적 맥락과 행위자들이 소거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특히, 양적 방법론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주로 국가기구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양적 방법에 의해 재현된 데사코타는 실재(reality)를 반영하기보다는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물신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Ortega, 2012: 1121). 이러한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면서도 필자는 양적 방법론이 무용하다고 귀결 짓기보다는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탈국가 담론이 유행하고,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통계 기법이 발전한 현 시기에도 일국가 단위의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주체는 아직까지는 국가기구가 유일하다. 지구적 단위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제기구들도 회원국들이 제공한 자료들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개별 국가 단위를 넘어 전지구적인 도시화 패턴을 추적한 연구들에서는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와 도시화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GDP 관련 자료는 여전히 국가 스케일에 국한되고, 국가 스케일 아래로 내려가 도시 및 지역별 GDP 자료는 부재함을 연구의 한계로 밝힌다(Seto et al., 2011: 8). 이들 연구조차 인공위성 자료와 같은 지구적 스케일에서의 자료를 활용하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은 국가가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는 실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로 하여금 도시 및 지역 단위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Hwang, 2016: 558).⁶ 더불어 양적 방법론으로 데사코타의 존재를 시각화할 수 있는 지역은 국가 단위 자료를 제공할 역량이 있는 몇몇 국가에 국한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수준의 통계구축을 모든 국가에 요구하기보다는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즉, 국가 차원의 통계역량이 부족한 국가는 국가 단위 통계 구축을 우선 장려하고, 후속적으로 도시 및 지역 단위 통계 구축으로 이행하는 단계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⁶ 도시 및 지역 단위의 통계구축에 미온했던 이유는 예산문제가 결정적이다. 이러한 부처의 경제적 논리를 압도하는 국가적 필요성을 정당화할 논리의 고안이 필요하다. 가령, 기후변화, 자연재난이 심화되는 와중에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도시 및 지역 단위 데이터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재원뿐만 아니라 통계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데, 유엔의 보편적 개발의제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일환으로 통계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손주희, 2021).

2. 기존 데사코타 개념과의 비교를 통한 북한식 데사코타의 특성 도출

III장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식 데사코타 출현의 배경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본 2절에서는 1절에서의 데사코타 개념을 둘러싼 인식론적·방법론적 논의와의 연관 속에서 북한식 데사코타의 특성을 도출한다.

McGee가 그린 그림 1은 도시와 촌락의 경계를 교란하는 데사코타의 공간성을 체크무늬로 표현하여 독자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고, 연구자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의 데사코타를 확인하고 싶게끔 동기를 불어넣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은 데사코타의 내용적 측면은 주목하지만, 그림 1 자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었다. 그림 1을 포함한 데사코타 원개념이 필자로 하여금 북한식 데사코타 연구를 추동한 계기를 제공했지만, 북한식 데사코타의 특성을 도출하는데 그림 1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Xie et al., 2007; Hong and Kim, 2022)가 있지만, 이들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포스트 사회주의 맥락에서 데사코타의 형성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개혁·개방의 정치·경제적 변동이 거의 없는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안적으로 ‘가설적인 북한식 데사코타의 공간구조’를 논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구체적 현실을 살피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북한식 데사코타의 공간적 특성은 김일성의 사회주의 농촌테제(김일성, 1994)로부터 비롯된다. 김일성의 농촌테제는 군 내부의 도시와 촌락의 경제적·정치적 연계를 강조하면서 군 외부로부터의 지원 없이도 군이 자력으로 유지되는 것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왜 도시와 촌락이 연계된 공간적 단위를 리나 도가 아닌 하필 군으로 설정했을까?

김일성은 농촌의 공간을 “분산성”(김일성, 1994: 33)으로 인식하면서 지역적으로 분산된 농촌들을 묶어서 도시와 연계시키기 위한 적절한 “통일적 지도의 단위”(김일성, 1994: 34)로 군을 규정했다. 공간적 스케일의 측면에서 김정일은 리/군/도를 다음과 같이 비교했는데, 리는 지역적 단위가 되기에는 너무 작아 인력과 물질기술적 토대가 빈약하고, 반면에 도는 각 군의 지리적 특성이 상이하어 이러한 각양각색의 지역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군이 “가

장 적합한 지역적 단위”로 규정했다고 설명한다(김정일, 2009b: 424).

김일성의 농촌테제에서 지역발전의 기본 단위로 군을 강조한 것은 북한식 데사코타를 정의하는 기본 특성이다. 농촌테제에서 언급하는 도시는 대도시가 아닌 군 안에 존재하는 중소도시를 가리키며,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다양한 농업/비농업 활동이 혼재된 군의 공간적 특성은 형태적으로 그림 1에서 데사코타를 가리키는 체크무늬와 유사하게 보일 것이다. 이처럼 군을 단위로 한 북한식 데사코타의 특성은 기존 데사코타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결정적 차이는 각각의 데사코타가 외부와 맺는 관계성에서 두드러진다.

그림 1에는 대도시가 존재하고, 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단(도로, 철도 등)의 발전을 통한 인구, 물류, 자본의 이동에 의해 데사코타가 형성되는 것으로 전제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식 데사코타는 사회주의 이념을 이유로 대도시의 성장을 지양한다는 점에서 대都市는 존재하지 않는다.⁷ 또한 표 1의 데사코타의 핵심 특성과 달리 북한식 데사코타는 각 지역을 연결하는 인프라는 미발달되었고, 국가의 통제에 의해 군 경계를 넘어선 인구이동이 제한된 공간적 조건을 가정한다. 이러한 공간적 조건은 군 내부의 읍, 리 간의 인구이동은 비교적 원활하지만, 군과 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동은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즉, 북한식 데사코타의 형성과정은 자본의 논리보다 사회주의 이념·체제의 논리가 압도적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기존 데사코타의 핵심 특성들과 상충되는 북한식 데사코타의 특성은 북한의 도시와 농촌의 혼재된 공간을 이해하는 데 데사코타 개념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할까? 앞서 필자는 다양한 농업/비농업 활동이 혼재된 공간적 단위인 군이 갖는 형태적 특성을 북한식 데사코타의 기본 특성으로 명시했다. 만약 각 국가의 지리적 특성을 모르는 상태로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인도네시아와 북한에서 동일한 데사코타의 형태가 확인된다면, 필자는 북한식 데사코타를 차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McGee가 그림 1을 고안한 것은 데사코타의 내적

⁷ 물론 북한의 현실에서는 평양과 같은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급 도시들이 존재한다. 다만 여기서는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북한식 데사코타의 이념적 형태(ideal form)를 논하기 때문에 대都市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특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간적으로 표출된 형태(form)의 중요성도 강조할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Ortega(2012: 1122)가 데사코타를 열린 개념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면서 도시적 생활방식과 농촌적 생활방식의 역동적 상호작용, 농업적 활동과 비농업적 활동 간의 연계를 데사코타의 ‘핵심 과정’으로 두고 다른 특성들을 소거한 것처럼, McGee가 논한 데사코타 특성들이 완벽하게 북한에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그치기보다는 북한식 데사코타에서 McGee가 규정한 데사코타의 핵심 특성(즉, 균을 매개로 한 농업/비농업 활동의 혼재성)이나 형태적 동일성이 확인되지만, 왜 나머지 다른 특성들은 적용되지 않는가를 살피는 것이 북한식 데사코타를 규정하는 적절한 접근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식 데사코타의 공간적 특성을 논해 보자.

북한식 데사코타의 첫 번째 특성은 선행 데사코타 연구들은 이것의 형성을 자본 중심적 현상으로 보지만, 북한식 데사코타의 형성에는 이념·체제라는 정치적 논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도시 및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화 과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지만, 대체로 자율적 시장경쟁을 통해 자본의 흐름이 도시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장하려 한다(Harvey, 1985). 특정 입지에 자본이 투자되고, 고용수요가 창출되면서 외부(주로 촌락지역)로부터 인구가 유입되어 도시가 성장하고, 그중 일부는 대도시가 되면서 창출되는 부가 결국 저발전 지역으로도 흘러들어가면서 사회 전체가 부유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McGee(1991)는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예비군들이 포진된 촌락지역으로 자본이 흘러들어가면서 데사코타가 형성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형태적으로 서구의 도시화 과정과는 다름을 강조한다. 하지만 새로운 공간의 생산에 있어서 자본을 주요 행위자로 보는 인식은 두 유형이 공유한다.

또한 McGee는 데사코타가 공간적으로 대도시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그림 1의 대도시들도 서구의 대도시들처럼 자본주의 도시화의 산물로 간주한다. 반면에 북한식 데사코타는 그림 1에서 데사코타를 형성하는 기본 구성에 포함된 대도시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가설적 공간구조는 사회주의 체제의 도시에 대한 입장과 연관된다.

사회주의 이념은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고, 평등을 지향하면서 자본주의 국

가에서 나타나는 도시와 촌락 간의 불균등 발전을 지양되어야 할 현상으로 규정하고, 불균등발전의 원인으로 대도시를 지목한다. 따라서 도시와 촌락은 생산적·소비적 측면에서 상호 연계되어 발전을 공유하고, 대도시의 성장을 늦추려는 정책을 시도했다. 국가별(발전된 사회주의 국가 또는 사회주의 개발도상국), 각국의 발전단계(도약준비→도약→성숙 등)에 따라 도시성장의 속도는 다르겠지만, 유사한 환경의 자본주의 도시들에 비하면 사회주의 도시들은 도시화 속도가 대체로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도시성장을 늦추는 조치는 지배세력의 이념적·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었다(Murray and Szelenyi, 1984: 91, 97).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도시에 대한 인식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도 확인된다. 1962년 군의 역할을 강조한 첫 번째 글인 창성연석회의의 결론에서 김일성은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나타나는 자본주의 도시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도시에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면에서 좋지 못합니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였던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폐단이 나타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장을 도시에만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여러 곳에 건설하여야 합니다”(김일성, 1982: 253, 밑줄은 인용자주).

김일성의 사회주의 농촌체제의 첫 문장은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농민문제, 농업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김일성, 1994: 1)다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의 농촌과 도시에 대한 인식은 사회주의 이념과의 직접적 연관성 속에서 논해졌다.⁸ 김일성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권력의 정당성과 정통성은 맑스와 레닌으

⁸ 1969년 북한의 조선로동당 이론지인 『근로자』에 게재된 김일성의 사회주의 농촌체제에 대한 의의를 논한 저자 미상의 글에서도 글의 첫 문장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저자 미상, 1969: 44)로 시작하고, 본문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근본문제의 하나”(저자 미상, 1969: 45)라고 서술하면서 사회주의 이념과의 관련성을 강조했다.

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사상가들에 상당히 의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의 권력구조가 집단지도체계인 것과 달리 현재의 김정은 정권까지 3대 혈통승계를 통해 독재정권이 유지되는 북한은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대의 권위와 위업을 이용하는 유훈통치⁹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차이도 존재한다(김갑식, 2012). 김일성의 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리고자 출간된 김정은(2014)의 노작에서는 선대의 성과들을 언급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3쪽), “김정일애국주의”(21쪽) 등의 선대에 기댄 이념들을 나열하면서 정통성을 구하지만, 맑스-레닌주의는 호명하지 않았다.¹⁰

정리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도시와 농촌의 연계가 강조된 데사코타의 형성이 자본이 아닌 체제·이념의 논리에 의해 전개될 수 있으며, 특히, 3대 권력계승이 이뤄진 북한은 유훈통치를 통하여 순수한 사회주의 이념으로서뿐만 아니라 선대의 정책으로서 데사코타를 지향하는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국가공간에 새겨진 공간적 경로의존성도 군을 단위로 한 분산형의 데사코타를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강조한 사회주의 이념·체제라는 정치적 논리나 농촌의 분산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의도만으로 군을 단위로 한 분산형의 공간정책을 추진하게 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바로 농촌과 연계가 이뤄질 도시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공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요한 공간적 경로의존성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김일성은 1958년 인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 계획의 방향을 논하면서 일본제

⁹ 보통 유훈통치는 구체적 시기 가령, 김정일은 약 4년(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1998년 국방위원장 취임까지)을 명시하지만, 이 글에서는 공식적인 유훈통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통치기간 중에 선대의 권위와 위업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유훈통치로 간주한다.

¹⁰ 북한의 주요 지도적 지침에서 맑스-레닌주의 문구가 삭제된 시점은 1980년 6차 당대회에서의 규약 수정부터라는 점에서 김정은 집권 이전이었다(김갑식, 2012: 15). 하지만 김정은이 사회주의 사상가로서 맑스와 레닌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간과한 것은 아니다. 가령, 김정은을 이상화하는 내용이 담긴 『위대한 인간 김정은』(오성길, 2019)에서는 “맑스와 엥겔스, 레닌도 국제노동운동과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글을 많이 썼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 글을 발표한 것은 다 20대 중반기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0대에 벌써 저술활동을 시작하시었다”(오성길, 2019: 27)면서 핵심적인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언급했다.

국주의에 의하여 일본을 위한 원료공급기지의 기능으로 전략된 기형적 조건이 남겨진 국가공간이 현재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김일성, 1981: 106). 이와 유사한 논조로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연구한 북한의 한 연구자는 “우리나라 공업의 매개 부문들은 일본독점자본에 원료와 반제품을 생산보장해주는 부속물로 되어있었고 자체 부문들 사이의 생산소비적 연계는 거의 없었다”(김춘성, 1989: 9)면서 이러한 ‘기형적이며 예측적인 공업구조’로 인하여 해방 직후에 도시와 농촌 간의 연계는 끊겼다고 평했다. 즉, 식민모국으로 보낼 자원을 운송할 목적으로 항만과 철도가 일부 건설되었지만, 북한의 전반적 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들을 잇는 도로와 철도가 미비한 조건에서 자본주의 대도시처럼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어 경제성장을 야기하는 방식을 북한이 시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¹¹ 따라서 인프라 구축 역량이 없는 당시의 북한으로서는 현실적인 정책대안은 군 단위의 분산화된 발전안이 실행가능한 선택지였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전쟁을 경험한 여파이다. 한국전쟁은 북한에 남아 있던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인프라들마저 상당수 파괴시켰다(김태우, 2013; 김태운, 2022). 1960년대 초반은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휴전상황이었고, 북한의 국가공간간의 발전방향은 전쟁에 대한 대비까지 고려해야 했다. 1964년 사회주의 농촌테제가 발표되기에 앞서 군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논했던 1962년 창석연석회의의 결론에서 김일성은 “도시에만 공장을 집중시켰다가는 일단 유사시에 그것들을 옮기기도 힘들고 적의 공습이나 당하면 한꺼번에 다 마사질 수 있”(김일성, 1982: 254)다면서 전쟁 대비의 논리를 밝혔다. 김일성의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논한 김정일의 1964년 글에서는 한국전쟁 시기에 중요생산시설을 안전지대에 분산배치하고, 여러 지역에 지방공업기지를 만든 경험을 언급하면서 유사시를 대비하여 군을 거점으로 한 지방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정일, 2009b: 429).¹²

¹¹ 앞서 인용한 김일성의 자본주의 도시에 대한 평가에서 그는 “(북한이: 인용자주) 자본주의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였던 조건”(김일성, 1982: 253)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발전의 ‘조건’은 풍부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¹² 김병로는 1964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의 글이 실제 공식 발표는 1985년이었던 이유로 당시 한반도 군사위기가 상존하는 와중에 김정일이 국민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

이처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의 국가공간에 새겨진 공간적 경로의존성은 자본주의 도시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와 같은 공간적 조건 위에 우발적이게도 도시와 촌락의 연계를 강조하고, 대도시의 성장을 지양하는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고, 3대 세습을 거치면서 유혼의 일환으로 군을 단위로 한 북한식 데사코타 아이디어가 김정은 시대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

셋째, 북한식 데사코타의 거주 인구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선행연구에서 데사코타의 형성이 가능했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인구적 특성을 강조한다. 데사코타가 조성될 공간인 촌락지역에 농업인구가 밀집되고, 이 인구집단으로부터 비농업 부문 경제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이 공급되면서 데사코타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McGee, 1991: 14-15). 2008년 기준 북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북한의 도시인구는 1,415만 명, 농촌인구는 919만 명으로 북한 전체인구에서 약 39.3%가 농촌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이 강조한 데사코타의 인구적 특성을 북한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KOSIS, 검색일: 2023. 2. 1.).¹³ 하지만 인구이동에 있어서 북한식 데사코타는 선행연구와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McGee(1991: 15-17)는 데사코타 내부의 농업인구가 비농업 부문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한 이유로 데사코타 내부에서의 원활한 인구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과 저렴한 교통수단에 있음을 지적한다. 교통 인프라의 발달로 인하여 대도시와 인접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인구가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데사코타 내부의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비농업 부문의 경제활동도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발달된 교통 인프라는 국가의 투자가 중요했음을 강조한다.

2008년 기준 북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군의 경계를 벗어나

작하고, 김정일식 경제정책을 알아야 하는 상황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했다(김병로, 1999: 43-44). 1990년대 들어서 김일성 사망(1994년)과 고난의 행군이라는 잇따른 체제의 위기에 직면한 김정일은 군 단위 자립체제 외에 마땅한 정책이 없었을 것으로 김병로는 평가했다(김병로, 1999: 47-48). 역대 북한정권에서 최고지도자들의 대외적 군사위기에 대한 인식과 이것이 도시·촌락의 공간계획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¹³ 참고로 한국은 전체 인구에서 농촌인구 비중이 북한의 2008년 인구센서스가 발표된 같은 시기에는 10.6%, 2021년 현재는 8.6%로 매우 적은 비중이다(KOSIS, 검색일: 2023. 2. 1.).

표 2 남한과 북한의 국내이동 인구

연도	북한		남한	
	이동인구 (1,000명)	총인구 대비 비율 (%)	이동인구 (1,000명)	총인구 대비 비율 (%)
1980	920	5.3	8,259	21.9
1982	927	5.2	8,616	22.1
1985	882	4.7	8,679	21.4
1986	997	5.2	8,660	21.3
1987	1,134	5.9	9,309	22.6
2005	-	-	9,141	20.8
2008	746	3.5	-	-

출처: 홍제환 외(2020: 85).¹⁴

거주지를 옮긴 인구의 수가 74만 6,689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인데, 유사한 기간에 조사된 한국의 인구센서스에서는 시군구의 경계를 벗어난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8%인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인구이동이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홍제환 외, 2020: 85-86, 표 2 참조). 다만 같은 인구센서스 자료 분석을 통해 절대적 인구수는 미미하지만 도 단위를 넘는 장거리 인구이동에 비하여 시·도 내부의 단거리 이동은 보다 높게 나왔다(이상립, 2013: 41-42). 상대적으로 군 내부의 이동은 용이한 것이다. 비록 북한 헌법에는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상 북한 당국은 엄격한 여행증 발급을 통해 주민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통일연구원, 2022: 116).¹⁵ 즉,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해외 데

¹⁴ 표 2를 작성한 홍제환 외(2020)는 북한의 인구이동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980년부터 1987년 수치는 다른 연구자들의 분석을 가져왔다. 1980~1987년 통계에서 북한의 인구이동은 리에서 다른 리로 이동한 경우와 도에서 다른 도로 이주한 경우를 집계한 것이고, 1980~1987년 남한의 인구이동은 시도 내 이동과 시도 간 이동의 총합이다.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는 군의 경계를 벗어나 거주지를 옮긴 경우이고, 비슷한 시기인 2005년의 남한 인구이동은 시군구 밖으로 이동한 경우이다. 엄밀한 통계학적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의 표로 넣기 어려운 다양한 통계수치들을 모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2를 통하여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북한 각각의 인구이동 비율의 일관된 패턴(북한은 5% 안팎, 남한은 20% 안팎의 비율 유지)이 확인된다.

¹⁵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검문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뇌물, 교통수단의 다변화(택시, 시외버스, 트럭 등)로 인하여 예전보다 주민의 이동역량은 증가했지만, 뇌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사코타의 주민들과 달리,¹⁶ 북한주민들은 이동의 제약을 상당히 받고 개인의 의사와 무관한 계획경제 지침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언뜻 데사코타 거주 인구의 이동성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은 표 1에 밝혀진 기존 데사코타의 핵심 특성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북한식 데사코타가 근본적으로 데사코타로 볼 수 있느냐는 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논했듯이, 북한식 데사코타의 기본 단위가 군이라는 필자의 접근에 동의한다면, 군을 벗어난 인구이동에 대한 제약은 높더라도 군 내부에서는 농업/비농업의 혼재적 양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이동성이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상황은 인구 이동성의 높고 낮음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구이동을 어떠한 지리적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통치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가미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인구의 이동성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III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식 데사코타를 추진하게 된 배경, 의도, 공간적 특성을 살핀다.

III. 김정은 시대, 북한식 데사코타의 출현

군을 단위로 한 도시와 농촌의 연계에 대한 핵심 논의가 담긴 1964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김일성의 사회주의 농촌테제가 출간된 지 57년 만에 그의 손자 김정은은 2021년 12월 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농촌테제를 발표한다. III장의 1절에서는 북한 최고지도자들이 지향하는 북한식 데사코타 논의가 담겨 있는 김일성의 농촌테제와 김정은의 새로운 농촌테제와의 비교를 통해 두 테제 간에 유사점과 차이를 살펴본다.¹⁷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식 데사코타는 어떤 형

서 주민들 간의 이동역량은 차등화되었다(통일연구원, 2022: 119-120).

¹⁶ 해외 데사코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이동의 자유가 곧 그들이 민주적인 상황에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 앞서 Ortega(2012)의 연구에서 보듯이, 초국적 자본이나 국가에 의해 추진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 대형 리조트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은 토지의 탈취를 겪기도 한다.

¹⁷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은의 농촌테제의 위상에 준하는 농촌테제를 따로 발표하지 않았기

태로 출현하고 전개될지를 전망한다. 2절에서는 군을 단위로 한 농촌살림집 중심의 북한식 데사코타의 형성배경과 의도를 추정한다.

1. 김일성과 김정은의 농촌테제 비교¹⁸

김정은 농촌테제의 새로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농촌테제와의 비교가 효과적이다(표 3). 김일성의 농촌테제는 테제에 담겨진 전략들이 추진될 공간에 따라서 농촌, 도시, 군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먼저, 김일성의 농촌테제에서 농촌의 공간을 살펴보자. 김일성은 농촌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김일성, 1994: 4) 한다는 3대 혁명을 제안했다. 기술혁명과 사상혁명이 농촌 주민들에게 생산성 향상을 위

표 3 김일성과 김정은의 농촌테제 비교

역대 테제 주목하는 공간	김일성의 1964년 농촌테제	김정은의 2014년 노작	김정은의 2022년 새로운 농촌테제
농촌	3대 혁명	3대 혁명의 선택적 계승(기술혁명 중심)	3대 혁명의 전반적 계승(문화혁명 강조)
도시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비중 축소	언급 없음 ¹⁹
군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거점으로 군을 강조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간략히 언급	도당, 시당과 함께 군당 위원회의 역할을 간략히 언급

출처: 저자 작성.

때문에 본 비교에서 빠진다. 다만 그는 김일성의 농촌테제를 옹호하는 글들을 작성했다(김정일, 2009a; 2009b; 2011). 김정일 스스로 김일성의 농촌테제를 “농촌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을 처음으로 밝힌 독창적인 사상”(김정일, 2009a: 479)이라고 평한 입장에서 김일성을 잇는 새로운 독창적인 테제를 쓰기 어려운 위치였을 것이다. 만약 김정일의 노작들 중에서 농촌테제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언급할 만한 노작이 있었다면, 김일성의 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을 맞이하여 작성한 노작(김정은, 2014)처럼 유홍통치의 일환으로 김정은은 김정일의 노작을 기념하는 행위를 했을 것이다.

¹⁸ 1절의 일부 내용은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황진태(2022b)를 재구성했음을 밝힌다.

¹⁹ 익명의 심사자는 실제 정책적으로는 촌락 지역에 노동력, 비료(도시거름), 영농물자 등을 도시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테제의 내용과 실제 정책 간의 괴리가 있음을 지적한다(로동신문 23/01/03;

한 ‘채찍’이라면, 문화혁명은 그러한 채찍을 상쇄시키는 ‘당근’으로 볼 수 있다. 문화혁명은 농촌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개선시키는 것도 포함되지만 군의 역할을 중시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그는 “군소재지에는 학교, 병원, 영화관, 서점, 도서관 등 여러 가지 문화후생시설들이 갖추어”(김일성, 1994: 40)져야 한다면서 “도시의 선진적인 문화와 생활풍습을 농촌에 보급하는 기지”(김일성, 1994: 40)로서 군의 역할을 중시했다.

김일성은 농촌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촌에서”(김일성, 1994: 4)의 혁명만을 강조하지 않고, 농촌 밖 도시의 역할도 강조했다. 농촌테제에서 “공업은 인민경제의 지도적 부문이며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농촌에 비하여 앞서 나아가고 있다”(김일성, 1994: 8)고 밝혔듯이, 1964년에 이미 농업과 공업 간 발전의 격차가 공간상으로는 농촌과 도시로 나뉘어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이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는 “선진적인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여야만 뒤떨어진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끌어 올릴 수 있다”(김일성, 1994: 8)면서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김일성, 1994: 7)을 강조한 것이다.

김일성의 농촌테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과 2장이 3대 혁명에 대한 필요성과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과업을 설명했다면, 3장은 앞서 논의된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처럼 보이는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거점’으로서 군을 주목하면서 3장의 제목처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군의 역할과 임무”를 논했다. 테제의 전체 구성에서 독립된 장으로 군에 대한 논의가 할애된 것은 김일성이 농촌테제에서 군의 역할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²⁰

다음으로는 김정은의 새로운 농촌테제를 살펴보자. 김정은은 새로운 농촌테

23/01/05; 23/01/10; 23/01/18). 그런데 최근 착공식을 가진 평양의 서포지구 건설(4,100세대 규모)을 보면, 지방에서 무려 10만 명의 청년들이 탄원의 형태로 노동력이 징발되었다(로동신문 23/02/26). 즉,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수준과 비교하여 도시에 대한 농촌의 지원 수준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농촌에 대한 도시의 탈취 및 도농간 불균등발전을 가리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농촌에 대한 도시의 ‘일부’ 지원이 북한체제를 통하여 과잉보도된 것은 아닌가라는 반문도 가능하다. 북한체제에서 주요하게 보도된 도시거름 보내기는 농촌에서 토양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도시의 입장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의 ‘오물’을 해결하려는 의도도 있다.

²⁰ 앞서 II장 2절에서 북한식 테사코타의 특성을 논하면서 김일성의 농촌테제에서 군에 대한 논의는 설명되었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제를 발표하기 이전인 김일성의 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이었던 2014년 2월에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노작을 발표했다. 앞서 김일성의 농촌테제를 공간적 차원에서 분석한 틀을 김정은의 노작에 적용하여 계승과 차이를 확인해 보자. 먼저, 농촌에서의 3대 혁명을 김정은도 받아들이지만, 3대 혁명 중에서 기술혁명에 보다 집중했다. 이는 노작 제목에 ‘농업생산’이 포함된 것에서 보듯이, 생산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농법(유기농법, 임농복합경영방법 등)을 소개하는데 총 23페이지 중에서 19페이지를 할애했다. 반면, 나머지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은 “성과적으로 추진”(김정은, 2014: 2) 되었다면서 짧게 언급되었다.

2014년 노작은 농촌에서의 3대 혁명(특히, 기술혁명을 강조)을 계승한 형태지만, 김일성의 농촌테제가 밝힌 문화혁명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또한 농촌문제에서 도시의 역할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김정은, 2014: 2)라는 문장으로 다루면서 비중이 축소되었다. 더구나 김일성의 농촌테제가 “독창적인 사상”(로동신문 22/08/09)으로 평가받는 핵심 부분인 군의 역할이 빠져 있다. 이처럼 김일성의 농촌테제로부터 3대 혁명(기술혁명 강조, 나머지 2대 혁명 축소)의 선택적 계승과 농촌문제에서 도시의 역할의 현저한 축소 그리고 군의 역할이 누락된 배경에는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권좌와 함께 물려받은 대북제재와 경제적 궁핍에 직면한 집권 초기에 인민생존의 최소 요건인 식량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2014년 노작에 이은 김정은의 새로운 농촌테제를 살펴보자. 2014년 노작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의 3대 혁명은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로동신문 22/01/01)으로 규정, 계승되었다. 2014년 노작의 기술혁명 부분에서 유기농법, 임농복합경영 등의 새로운 농법이 제시되었듯이, 2022년 새로운 농촌테제의 기술혁명 부분에서는 정보화,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기조에 조응하여, 농업근로자를 “지식형의 근로자”로 만들기, “세계 농업발전추세에 맞게 농업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 “과학농사제일주의” 등의 새로운 지향, 구호가 제시되었다. 김정은 본인이 밝히듯이,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장성시키는 것”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식량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

제임을 재확인시켜 준다.

다음으로 사상혁명을 살펴보면, 김일성의 농촌테제에서 “농민들의 의식 속에 는 낡은 사상 잔재”(김일성, 1994: 6)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김정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서도 “농업근로자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라고 말한 점에서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원회의에서 전반적으로 강조된 ‘내핍과 헌신의 이데올로기’ 강화가 새로운 농촌테제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2022). 끝으로 문화혁명 부문에서는 “수도의 문화, 노동계급의 문화, 시대의 본보기문화를 지방과 농촌에 끊임없이 전파, 확대하여 농촌문화혁명을 추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일성의 농촌테제에서 확인된 ‘채찍’으로서의 기술혁명과 사상혁명 그리고 ‘당근’으로서의 문화혁명의 관계설정은 김정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서도 확인된다(황진태, 2022b).

1절에서 마지막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2014년 노작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농촌테제에서도 김정은은 군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살폈듯이,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위한 군의 역할은 김일성 농촌테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서는 해당 논의가 빠져 있다. 2014년 노작의 말미에 관리의 측면에서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간단히 언급했고, 새로운 농촌테제에서도 2014년 노작과 유사하게 말미에 시·군·도당위원회의 역할을 간단히 언급한 것이 전부다. 순전히 새로운 농촌테제만을 한정하면 김정은은 군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의 집권기간 동안 군과 관련한 북한 내부의 학술담론을 살펴보면 간접적으로나마 그가 군의 역할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인 2013년 6월에 군의 역할을 최초로 강조했던 김일성의 창성연석회의 결론(김일성, 1982)이 발표된 창성군을 현지 지도했다. 김정은의 방문을 보도한 『로동신문』 2013년 6월 14일자에는 여러 편의 기사로 구성되었고, 각 기사의 서두는 김일성의 창성연석회의 결론이 아닌 김정일이 2002년에 발표한 「역사적인 창성연석회의정신에 따라 군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갈데 대하여」(김정일, 2013)를 “고전적 노작”²¹으로 칭하면서 시작된다. 이는 김정은이 바로 앞의 정

²¹ 김정은의 창성군 방문을 보도한 『로동신문』은 김정일의 노작을 고전적 노작이라고 칭했지만,

치지도자였던 아버지로부터의 정치적 정통성을 계승했음을 강조하려는 유혼통치의 의도가 확인된다.²² 비록 로동신문 보도에서 “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김정은의 발언은 확인되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은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로동신문』을 통하여 군에 대한 그의 생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북한의 경제 분야에 대한 북한지도자의 정책적 관심사를 유추할 수 있는 학술지인 『경제연구』에 게재된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김정은의 군에 대한 인식을 간접 유추할 수 있다. 김정은의 2014년 노작이 발간된 해에 게재된 김영옥(2014)의 논문제목이 “군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인민들의 식량문제해결의 근본담보”인 것에서 보듯이, 농업생산성을 강조한 김정은의 노작에 조응하는 단조로운 글도 있지만, 군이 다른 공간적 스케일(다른 군, 도)과의 관계성에 대한 다소 대립되는 입장들도 확인된다.

먼저, 군의 이해관계와 군 단위의 특수성을 강조한 입장이다. 길순영(2015b)은 군경제발전계획은 “군내 주민들의 물질문화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문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예견하는 계획”(18쪽)이라면서 군 거주민들의 이익을 강조한다. 이러한 군 거주민의 이해관계에 대한 강조 입장은 “군을 단위로 하는 경제발전계획은 그 목적과 내용, 대상과 방법 등에서 도를 단위로 하는 지방경제계획과 엄격히 구별된다”(18쪽, 밑줄은 인용자주)면서 도 단위와의 비교 속에서 군 단위의 특수성을 부각했다. 다른 군과의 관계에서도 “군들 사이의 합리적인 생산소비적 연계를 보장하는데 근본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군을 종합적인 살림살이 단위로 꾸려 군내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적 생활조건을 자체로 마련”(18쪽, 밑줄은 인용자주)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길순영(2015b)만을 본다면 마치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지역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힌다. 김일성

사실 해당 글은 창성군의 기업소 시설, 문화시설의 관리, 실태에 대한 김정일의 단편적, 인상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 대부분이고, 김일성의 창성연석회의 결론에서 다른 지역발전에서 있어 군의 역할에 대한 추상화된 논의는 김정일의 노작에는 없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다른 노작들과 비교하더라도 수준이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창성연석회의 결론문에 대한 단 한 번의 언급 없이 김정일의 노작만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사실에서 유혼통치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²² 또한 『로동신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08차례, 어버이장군님께서 60차례나 찾아”(로동신문 13/06/14)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연속선상에서 김정은의 현지지도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군 단위를 강조했던 것은 중앙의 통제²³가 전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이 없는 그의 글은 중앙의 시각에서는 ‘군 단위 지역이기주의’로 볼 여지가 있지만, 저자가 이보다 앞서 출간한 다른 글(김순영, 2015a)에서는 군경제발전계획에 있어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와 “국가의 통일적 지도관리”(김순영, 2015a: 19)를 확고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퇴로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군의 경계 내부보다 외부와의 연계성을 강조한 시각이다. 김정은의 집권 직후인 2013년에 게재된 윤창전의 글은 “부단히 변화 발전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종다양한 제품을 생산”(15쪽)해야만 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서 지방경제 현대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군과 도의 관계를 유연하게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즉, 오늘날 군에 위치한 지방공장은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을 위해서 “군의 범위를 벗어나 도적인 범위에서 더욱 긴밀한 생산기술적 연계를 맺”(15쪽, 밑줄은 인용자주)어야 한다면서 도는 “시, 군들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보장하는 중심”(16쪽)적 역할이 있음을 명시했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군 단위에 대한 강조가 현장에서 도그마(dogma)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군의 발전을 위해 외부와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계하지 않아 실패된 사례들을 연구자가 목격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처럼 김정은 집권 초·중반기까지 다소 대립되는 시각들이 『경제연구』에 게재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 집권한 지도자가 경제개발구를 포함한 시장화 드라이브를 걸면서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감이 북한 학계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했을 수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 게재된 백금철의 글은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이러한 연계²⁴는 군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진행되는 연계이며 한 지역 안에 있는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연계일 뿐만 아니라 인민생활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군을 단위로 진행되는 연계”(백금철, 2019: 20, 밑줄은 인용자주)라면서 군의 경계

²³ 김일성은 농촌테제에서 “농민들은 군을 거쳐서 당의 정책을 받아들”(김일성, 1994: 41)인다면 서 중앙과 군 간의 정치적 관계도 명시했다.

²⁴ 지방공업과 농업의 연계, 지방공업과 상업의 연계, 지방공업과 중앙공업과의 연계를 가리킨다.

내부를 강조했다. 이는 2017년 대북제재 강화,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외관계 악화와 그 대응으로 북한 당국이 자력갱생 노선으로 급선회한 정책기조에 맞추어 지역발전을 위한 군에 대한 공간적 인식도 군의 경계 내부에 강조점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경제연구』가 북한지도자들의 정책적 관심사와 조용하다는 전제에 독자들이 동의한다면, 김정은 집권 시기에 게재된 군의 역할과 관련한 『경제연구』 논문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비록 새로운 농촌테제에는 군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없더라도 이러한 누락은 김정은이 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은 아니며 군의 역할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주의농촌의 발전에서 군이 매우 중요한 역할”(김일성, 1994: 35)을 한다는 선대가 설정한 기본전제만 부정하지 않는다면 군의 경계 안의 내부적 연계를 강조하는 입장(김순영, 2015b; 백금철, 2019)이든 군의 경계 밖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입장(윤창진, 2013)이든 김정은에게는 상충되기보다는 정세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김정은의 새로운 농촌테제의 구성을 상기해 보자. 김일성의 농촌테제가 3대 혁명을 논하고서 군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김정은의 새로운 농촌테제는 3대 혁명을 논한 다음에 문화혁명에 속하는 농촌살림집 건설을 강조했다. 비록 새로운 농촌테제가 『로동신문』 2면을 차지하는 짧은 분량이지만 두 테제의 구성만을 비교하면 군의 역할과 농촌살림집 건설 간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농촌살림집 중심의 북한식 데사코타의 형성

2014년 노작과 비교하여 김정은의 새로운 농촌테제의 차이는 문화혁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농촌테제의 구성은 먼저 3대 혁명을 설명하고, 이어서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 당의 농촌건설 정책”이라 밝히면서 문화혁명의 구체적 형태를 논한다. 새로운 농촌테제에서 밝

한 ‘삼지연시 농촌마을’은 다른 농촌지역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로 규정된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문화혁명의 일환으로 농촌살림집²⁵ 건설을 강조했을까?

2014년 노작에서 김정은이 농업생산만을 강조하고, 농촌의 도시화를 중시하지 않은 이유는 식량 증대가 도시와 함께 농촌 인민들의 생활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 안정적 통치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후 김정은은 식량문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상한 사회적 갈등인 일찍이 김일성이 염려했던 도농 간 불균등발전 문제가 대두된다. 역사적으로 북한의 불균등발전 문제는 북한 내부의 순수한 국내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대외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왔었다(Son and Cho, 2021). 지난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3차 핵실험(2013년), 4~5차 핵실험(2016년)과 함께 각종 발사체들을 실험하면서 대외관계 악화와 대북제재 강화로 교역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졌고, 결정적으로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마저 결렬되면서 자력갱생 노선이 다시 소환되었다(홍민 외, 2021: 34-35).

이러한 당면 위기를 벗어나고자 2021년 1월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을 새롭게 제안한다.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의 ‘전면’은 “나라의 모든 분야와 지역,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로동신문 21/12/02)을 의미한다. 김정은은 지금까지의 북한경제는 “불균형적인 발전”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은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막는다고 진단했다.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을 북한 당국이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까지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은 이전 정권들과는 차별화된 행보다. 같은 해에 발표된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이행상황을 보고한 자발적 국가보고서에서도 북한은 도시와 촌락 간의 불균등 발전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밝혔다. 이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불균등 발전을 사회문제로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DPRK, 2021: 35). 이러한 북한 당국의 공개적 표명의 이면에는 통치의 측면에서 저발전 촌락주민들의 소외감에 대한 당국의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할 것

²⁵ 오해를 피하고자 설명하면, 북한매체에서 사용하는 농촌살림집은 농촌에 지어진 살림집뿐만 아니라 해안, 산간지방과 같은 비도시 지역에 조성되는 살림집들을 아우른다.

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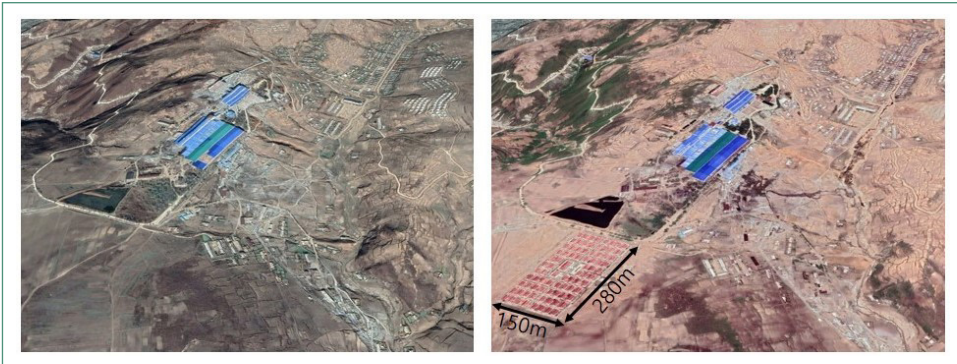
그런데 북한 당국의 공식 인정이 곧 중앙의 지방으로의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일성부터 지향되어 온 군 단위 발전전략의 역사·지리적 경로의존성과 김정은 정권이 처한 대내외적 복합위기(대북제재+지역 불균등발전+코로나19 팬데믹 등)와 접합되면서 “시, 군 일군들은 자기 지역발전을 당 앞에 전적으로 책임지자”(로동신문 21/09/14)라는 『로동신문』 기사제목처럼 지역별 자력갱생이 사회주의 전면 발전의 핵심방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약 20년 전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군 단위 자립체계를 선구적으로 분석한 김병로는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북한은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추구해 온 군 단위의 지역별 자립체계를 더욱 확고히 가동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 그러나 이를 통해 북한은 극한 상황에 건디는 생존력을 키울 수 있을진 모르지만 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김병로, 1999: 15-16)라고 전망한 바 있다.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 복합위기에 직면하면서 자력갱생 노선을 택한 현 상황은 20년 전 김병로가 김정일 정권에 대해 전망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²⁶ 다만 이전 정권과 달리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지역 불균등발전이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로 공개 인정했고, 농촌살림집 건설이 불균등 발전을 해소할 해결책으로 간주하고서²⁷ 공세적으로 살림집 건설을 추진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실제 농촌살림집 건설 현황을 살펴보자.

그림 2의 왼쪽 사진은 함경남도 단천군 산간 오지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으로 촬영시기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첫

²⁶ 본 논문의 초고가 발표된 한 학술행사에서 김병로는 만약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추진했던 경제개발구 계획이 성공했다면 각 지역의 개발구에서 형성된 부가 주변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가면서 전반적 발전을 이끌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군 단위까지 내려가는 발전계획을 내놓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실패된 경제개발구와의 상관관계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 서지만 후속연구가 필요한 주제다.

²⁷ 지역 불균등발전은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등의 다면적 측면이 결부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지역 불균등발전을 해결할 주요 부문으로 주거를 특정한 것은 정권의 정책적 선택성을 보여 준다.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정문에서 살림집 건설을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로동신문 23/01/01)으로 규정한 것에서도 그러한 정권의 선택성이 읽힌다.



출처: 구글어스. 원본사진은 천연색임.

그림 2 함경남도 단천군 일대 농촌살림집 단지 조성(좌: 2020년 10월 촬영, 우: 2021년 5월 촬영)

해인 2020년 10월이다. 산간 오지에 어울리지 않는 대형 공장, 곳곳에 밀집된 낡은 단층 살림집들, 농지와 산림이 혼재된 사진 속의 공간구조는 북한식 데사코타를 나타내는 ‘체크무늬’의 일부로 보인다. 불과 반년 후인 2021년 5월에 동일 지역을 촬영한 오른쪽 사진의 하단에는 농지였던 자리에 빨간 지붕의 농촌살림집 단지(약 100세대 규모)가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경제제재를 받는 와중에 중국으로부터 공급받던 물자조차 국경전면봉쇄로 인해 더욱 감소되고, 방역통제로 국내 물자와 인구의 이동이 상당한 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발고도 1,000m의 오지에 신속한 건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저발전 촌락주민들의 소외감을 완화시킬 수단으로써 농촌살림집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그림 2의 지역뿐만 아니라 구글어스(Google Earth)로 북한을 들여다보면 기업소, 학교 등의 다른 건물보다도 빨간, 파란 지붕의 농촌살림집들이 전국 곳곳에 빠르게 건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저발전에 대한 소외감은 북한매체에 실린 저발전 지역 거주민들의 발언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김정은의 새로운 농촌테제가 발표된 2022년 1월 1일자 『로동신문』 8면에는 함경남도 오지에 조성

²⁸ 구글어스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 중에 두 촬영시기 사이에 촬영된 사진은 없다.



출처: 로동신문(22/01/01), 8면. 원본사진은 천연색임.

그림 3 농촌살림집 중심의 북한식 데사코타의 전경

된 검덕지구를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다(그림 3). 이 기사에서 검덕지구의 한 입주자는 “TV화면을 통해 삼지연시에 펼쳐진 인민의 리상향을 보면서 정말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²⁹ 그런데 나에게도 이런 꿈같은 행복이 차례졌다. … 도시부럽지 않은 멋진 새집을 마련해주신 …”이라는 발언에서 도시에 비하여 농촌의 저발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날 것 그대로 노출되었다. 삼지연시와 같은 발전된 도시에 대한 동경(“도시부럽지 않은”)과 그러한 동경이 주거공간에 투영(“멋진 새집”)된 것이다. 주민 인터뷰와 함께 실린 사진과 로동신문 기자가 검덕지구를 “삼지연시 다음가는 국가적인 본보기산간도시, 광산도시”라고 묘사한 것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농촌살림집은 지금까지 농촌에 건설된 거주공간과는 다르게 도시적 생활양식이 투영된 새로운 거주공간으로 규정된다. 즉, 김정은 시대의 북한식 데사코타의 핵심 형태는 농촌의 도시화의 일환으로 전국 곳곳에 건설될 농촌살림집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직 농촌살림집 중심의 북한식 데사코타의 형성이 김정은 정권에게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를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김정은의 새로운 농촌테제가 발표된 지

²⁹ 신문, 방송을 통해 평양의 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개발부터 최근 삼지연 개발까지 시멘트로 구성된 발전의 스펙터클에 노출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발전 촌락주민들의 소외감은 꾸준히 누적되었을 것이다.

1년이 된 2022년 연말에 개최된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문에는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인 시발을 떴고 전국의 시, 군들에 농촌발전의 새시대를 대표하는 본보기살림집들이 일떠섰”(로동신문 23/01/01)다며 농촌살림집 건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6차 전원회의 직후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공개된 국가예산보고에 따르면 농업부문에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6%에 해당하는 “많은 자금”을 들였고, 2023년에는 지난해의 114.7%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출할 것으로 밝혔다(로동신문 23/01/19).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문은 전년과 비교해도 경제 분야 보고의 비중이 상당히 줄었고,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한 채 건설 부문만이 성과로 제시되었다(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2023: 5-6). 지속되는 대북제재,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국경봉쇄, 군사실험으로 인한 대외관계 악화와 맞물리는 복합위기에 직면한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의 농촌테제가 그렸던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통한 농업, 공업을 아우르는 군 단위의 이상적인 경제발전의 상(想)과는 동떨어진 “시, 군들에서 건설역량강화에 사활을 걸고 달라붙”(로동신문 23/01/24.)이라는 지침을 내릴 뿐이다. 그리하여 군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의 지역에서 자력으로 농촌살림집 건설에 매진해야 하며, 그렇게 건설된 살림집들은 다가오는 연말에 군의 대표 성과이자 김정은 정권의 성과로 재현되면서 그다음 해에도 건설의 쳇바퀴만이 세차게 돌 것으로 예상된다. 즉, 획기적인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식 데사코타는 농촌살림집들로 지표면이 뒤덮인 체크무늬가 그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IV. 결론

지금까지 북한도시연구는 서구 학계에 뿌리내린 도시-촌락의 이분법에 의해 설정된 협소한 도시(즉, 선명한 행정경계 안에 상위 행정·교육기관, 중요 인프라, 많은 인구를 포함하는 공간적 집적체)의 범위 안에서 도시를 이해하고, 촌락을 포함한 비도시 지역과의 관계성이 도시화를 추동한 측면을 간과해 왔었다. 본 연구는 김일성부터 시작된 북한의 고유한 이념·체제적 특성이 만들어 낸 공간적·비공간적 경로

의존성과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 복합위기가 우발적으로 접합되면서 이에 대한 공간적 해결책의 일환으로 군을 단위로 한 농촌살림집 건설의 추진을 김정은 시대, 북한식 데사코타의 구체적 형태로 접근하고자 했다.

비교도시론의 관점에서 북한식 데사코타를 개념화한 필자의 관점에 동의하든 안하든 간에 본 연구가 도시-촌락의 이분법에 익숙했던 북한연구자들에게 적어도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북한의 도시공간을 다시 낯설게 볼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면 본 논문의 부제인 북한도시연구에 내재된 도시-촌락의 이분법을 적출하는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아시아 도시의 차원에서 데사코타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시아 도시를 다루는 국내 도시연구자들도 도시-촌락의 이분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시도한 비평이 그러한 이분법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람이다.³⁰

후속 연구에서는 ‘가설적인 북한식 데사코타의 공간구조’를 검증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접근과 비평이 필요하다. 가설적 공간구조는 특정 스케일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북한의 국가공간을 형성하는 여러 스케일 관계 속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이념형이 아닌 실제 북한의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대도시 평양이나 그보다 작지만 도소재 도시들이 촌락지역과 맺는 관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혹은 당연하게 간주해 온 ‘대도시’라는 이름표를 떼고 평양 자체를 데사코타로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구의 표면이 도시화 과정에 포섭된 상황을 가리키는 Henri Lefebvre(2003)의 도시사회(urban society)의 관점을 빌려 와 북한 전역을 덮어 버리는 체크무늬를 포착하기 위한 양적 방법론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식 데사코타의 이론적·경험적 층위를 다채롭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학제적 협동연구가 중요하다. 김일성 시기의 북한의 농촌 공간계획에 투영된 도농연계이론을 선도적으로 고찰한 김민아(2019), 김정은 시기에 도시와 농촌이 만나는 ‘연접공간’의 출현을 선제적으로 포착한 박희진

³⁰ McGee(1991)의 데사코타는 흔히 동남아 도시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같은 글에서 그는 한국, 일본, 대만도 데사코타의 측면에서 접근한 바 있다. 당시 그가 동아시아 도시화를 데사코타로 분석한 것에 대한 현 시점의 평가뿐만 아니라 현재 동아시아 도시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데사코타의 의의를 논하는 작업도 가능할 것이다.

(2020)의 연구들은 후속연구가 다학제적 협동연구를 지향해야 함을 알린다. 서론에서 제기했던 “북한도시연구에서 ‘도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투고일: 2023년 2월 8일 | 심사일: 2023년 2월 27일 |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27일

참고문헌

- 길순영. 2015a. “군경제발전계획화의 기본요구.” 『경제연구』 제3호, 18-19.
- _____. 2015b. “군경제발전계획의 본질적 내용과 특징.” 『경제연구』 제4호, 17-18
- 김갑식. 2012.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정치적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1-24.
- 김민아. 2019. “북한의 농촌 공간계획의 특징에 관한 연구: 김일성 시기 도농연계이론을 바탕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21권 4호, 9-16.
- 김병로. 1999.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통일연구원.
- 김영욱. 2014. “군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인민들의 식량문제해결의 근본담보.” 『경제연구』 2호, 12-14.
- 김일성. 1981. “제1차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결론 1958년 3월 6일.” 『김일성 저작집 1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03-136.
- _____. 1982.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 지방당및경제일군 창성련석회의에서 한 결론 1962년 8월 8일.” 『김일성 저작집 16권』, 241-285.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실현을 위하여 1』, 1-50.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은. 2014.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가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2009a. “농촌테제의 독창적인 사상을 정치경제학에 전면적으로 구현할데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학부장과 한 담화 1964년 5월 16일.” 『김정일선집 1권(1960.8-1964.6)』, 479-491.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9b.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김정일선집 1권(1960.8-1964.6)』, 415-458.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11. “사회주의농촌체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1월 20일.” 『김정일선집 7권(1974-1976)』, 80-100.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13. “역사적인 창성연석회의정신에 따라 군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갈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21권(2001.7-2003.8)』, 313-326.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춘성. 1989.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연계실험경험』, 사회과학출판사.
- 김태우. 2013.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 김태윤. 2022. “6·25 전쟁기 평양의 전시폭격과 도시방공정책(1950~1953).” 『현대북한연구』 제25권 2호, 83-129.
- 박성열·이은정·이정요·한지만. 2021. “북한도시연구의 성과와 과제: 선행연구 분석 중심으로.” 『Journal of North Korean Studies』 제7권 1호, 129-162.
- 박희진. 2020. “북한 도시-농촌의 연결공간과 파생되는 계층들.” 『문화와 정치』 제7권 3호, 211-241.
- 백금철. 2019.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한 현실적 방도.” 『경제연구』 제2호, 19-20.
- 손주희. 2021. “북한 통계부문의 지속가능한 협력방안 모색: 북한중앙통계국과 UN의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30권 3호, 1-35.
- 오성길. 2019. 『위대한 인간 김정은』, 평양출판사.
- 윤창전. 2013. “지방경제부문의 자재공급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직지휘하는 것은 현시기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담보.” 『경제연구』 제1호, 14-16.
- 이상림. 2013. “고난의 행군기 이후의 북한 내 인구이동: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 『통일문제연구』 제25권 2호, 29-60.
- 저자 미상. 1969.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근로자』 제11호, 44-51.
- 통일연구원. 2022. 『북한인권백서 2022』, 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2022.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 『Online Series』 CO22-01,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4&searchField=title&searchText=&biblioId=1550043>(검색일: 2023. 1. 3.)
- _____. 2023. “북한 제8기 제6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 전망.” 『Online Series』 CO23-01,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oI>

- d=1550860(검색일: 2023. 1. 3.)
- 황진태. 2022a. “비교도시론이 북한도시연구에 주는 함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5권 1호, 21-40.
- _____. 2022b.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 대한 도시주의적 분석.” 『Online Series』 CO22-02,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4&searchField=title&searchText=&biblioId=1550101>(검색일: 2022. 1. 3.)
- 홍민·강채연·박소혜·권주현. 2021.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KINU Insight』 21-02, 1-109.
- 홍제한·김석진·최지영·김수경. 2020.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통일연구원.
- DPRK. 20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The United Nation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검색일: 2023. 2. 1.)
- Dick, Howard W. and Peter J. Rimmer. 1998. “Beyond the Third World City: The New Urban Geography of South-East Asia.” *Urban Studies* 35(12), 2303-2321.
- Gottmann, Jean. 1961. *Megalopolis: The Urbanized Northeastern Seaboard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The Twentieth Century Fund, Kraus International Publications.
- Harvey, David. 1985. “The Geopolitics of Capitalism.” D. Gregory and J. Urry, 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New York: St. Martin's Press.
- Hong, Nami and Saehoon Kim. 2022. “Beyond Desakota: The Urbanization Process and Spatial Restructuring in Contemporary Vietnam.” *Urban Research and Practice*, 1-23.
- Hwang, Jin-Tae. 2016. “Escaping the Territorially Trapped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Thesis.” *The Professional Geographer* 68(4), 554-560.
- Lefebvre, Henri. 2003. *The Urban Revolu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cGee, Terry G. 1991. “The Emergence of Desakota Regions in Asia: Expanding a Hypothesis.” N. Ginsburg, B. Koppel, and T. G. McGee, eds. *The Extended*

- Metropolis: Settlement Transition in As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 Press, 3-25.
- Murray, Pearse and Ivan Szelenyi. 1984. "The City in the Transition to Soci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8(1), 90-107.
- Ortega, Arnisson Andre C. 2012. "Desakota and Beyond: Neoliberal Production of Suburban Space in Manila's fringe." *Urban Geography* 33(8), 1118-1143.
- _____. 2020. "Desakota 2.0: Worlding Hybrid Spaces in the Global Urban." *Urban Geography* 41(5), 668-681.
- Robinson, Jennifer. 2006. *Ordinary Cities: Between Modernity and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 _____. 2016, "Comparative Urbanism: New Geographies and Cultures of Theorizing the Urba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0(1), 187-199.
- Sayın, Özgür, Michael Hoyler, and John Harrison. 2022. "Doing Comparative Urbanism Differently: Conjunctural Cities and the Stress-testing of Urban Theory." *Urban Studies* 59(2), 263-280.
- Seto, Karen C., Michail Fragkias, Burak Güneralp, and Michael K. Reilly. 2011. "A Meta-analysis of Global Urban Land Expansion." *PloS One* 6(8), e23777.
- Son, Sung Hyun and Joonmo Cho. 2021. "Are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ffective? Assessing Nighttime Light in 25 Major Cities." *Pacific Affairs* 94(3), 464-492.
- Xie, Yichun, Michael Batty, and Kang Zhao. 2007. "Simulating Emergent Urban Form Using Agent-based Modeling: Desakota in the Suzhou-Wuxian Region in China."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7(3), 477-495.

『로동신문』:

2013. 6. 14.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창성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1)~(4)."
2021. 9. 14. "시, 군 일군들은 자기 지역발전을 당 앞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2021. 12. 2.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에 관한 사상의 기본내용."
- 2022a. 1.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 2022b. 1. 1. “산악협곡도시에 펼쳐진 사회주의 새 선경: 검덕지구에 수천세대의 살림집 건설, 새집들이 진행.”
2022. 8. 9. “창성련석회의 정신의 생명력은 시, 군발전의 새시대와 더불어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
2023. 1.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 1. 3. “1만여t의 거름을 집중수송: 황해남도에서.”
2023. 1. 5. “많은 거름을 사회주의농촌에 집중수송: 평양시에서.”
2023. 1. 10. “농업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적극 추진.”
2023. 1. 18. “당의 부름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열혈청춘들의 대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이후 전국의 1만 5000여명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진출.”
2023. 1.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 112(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2023. 1. 24.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 시, 군들에서 건설력량강화에 사활을 걸고 달라붙어야 한다.”
2023. 2. 26. “수도 평양에서 용감한 우리 청년특유의 불굴의 기상을 또다시 남김없이 펼쳐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에서 하신 연설.”

구글어스 홈페이지(검색일: 2023. 2. 1.)

KOSIS 홈페이지(검색일: 2023. 2. 1.)

Abstract

The Emergence of North Korean-style Desakota Regions in the Kim Jong-un Era? Extracting Urban-rural Dichotomy from North Korean Urban Studies

Jin-Tae Hwang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is study borrows the insight of the desakota concept in analyzing the urbanization of North Korea after Kim Jong-un came to power in 2011. The policy emphasis on the spatial linkage between villages and cities in units of counties and the process of rural urbanization with the construction of rural dwellings and greenhouse farms at the forefront, which is currently being developed in North Korea, leaves much room for interpretation in terms of 'North Korean-style desakota'. This article is expected to be effective in interpreting North Korea's urbanization by borrowing the critical mind of Terry McGee, who criticized Western urban studies that were obsessed with the urban-rural dichotomy.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the concept of desakota in the context of North Korean cities, and to provide an epistemological foundation to extract the dichotomy between city and village, which has been hindered in capturing the spatial dynamics of North Korean cities. The study also aims to contribute to expanding the horizon of the existing discussion on desakota regions of Asian cities through the North Korean-style desakota, which reveals the aspect that ideological and regime differences significantly affect the formation of desakota.

Keywords | North Korean cities, desakota, Kim Jong-un, urban-rural dichotomy, Asian cities, comparative urbanism

